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 분석

김 병 호*

- I. 서 론
- II. 본 론
- III. 결 론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채택한 회계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을 중심으로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 회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북한내부의 기업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이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자본주의 회계제도 모형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재무회계적 측면보다는 관리회계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셋째, 회계처리방법이 단순하고 통일적이다. 북한회계법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중앙집권적 경제구조하에서 기업을 통제·관리하려던 목적에서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과 재정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서술이 결여되어 있어 아직까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부기검증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된 규정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지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북한의 회계규정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을 서술하는데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 기업을 제외한 기업 및 조직에 적용되는 북한 회계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부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기업회계와 관련된 정보는 북한사회과학원에서 출판한 『경제사전』과 외국인투자법 관련 법에 포함된 여러 규정 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사전』에서는 부기의 정의, 회계 관련 용어, 주요 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 등 북한의 회계체계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은행부기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에서 회계절차와 결산에 대한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회계법에는 재무회계에 관한 법의 기본규정, 재무회계, 재무회계 분석, 재무회계 감사, 그리고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의 통제 및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회계법은 기본적인 회계 관련 정책과 제도, 해석에 대한 체제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과거에도 회계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법의 수준으로 제정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회계법은 실제 회계절차나 회계 용

어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회계의 주체를 기관, 기업, 기타조직으로 구분하고 각 주체간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회계 관련 규정은 이미 존재하지만, 회계와 관련된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법은 외국인투자은행법의 하부규정인 외국인투자은행부기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과 차이가 있다.

북한은 2002년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이하 7·1 조치)를 통하여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용역을 최소화하고 유료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대하여 예산 배분 및 계획 능력을 복원하려고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기관, 기업, 그리고 기타 조직들에게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초과이익을 경영단위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회계법은 이러한 북한의 환경변화에 따라, 각 경영단위 주체들간의 회계처리, 보고, 그리고 회계감사(북한에서는 회계검사라고 함)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위법의 개념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내부의 기업(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가 국가

〈표 1〉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 및 규정

대 상	외국인투자기업(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포함)
관 련 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은행법
관 련 규 정	외국인투자은행부기규정,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주 : 북한 회계법은 외국인이 참여하는 투자기업을 제외한 북한 내의 기업 및 조직에만 적용.

소유임)과 조직에 적용되는 북한 회계법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 및 회계검증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성공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과 합작 또는 직접 투자시 북한 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결산보고서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I. 본 론

1. 북한 회계법

북한 회계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5개장 4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 관련 규정의 상위법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은 재무회계에 관한 법의 기본규정, 제2장은 재무회계, 제3장은 재무회계 분석, 제4장은 재무회계 감사, 그리고 제5장은 재무회계보고서 작성의 통제 및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

에 언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1조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문구는 북한 회계법이 경제활동의 재정적 이익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각 조직단위에서의 재정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의 북한의 7·1 조치와 매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조직단위로 하여금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재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국가경제를 개선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 체계에서의 경제정책들이 시장개혁과 효율성 제고를 수행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회계기준의 제정 목적이 유용한 정보제공에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이러한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3조는 재무회계를 재정경제회계와 종합회계로 구분하였으며, 재정경제회계는 주로 북한 기업에 대한 회계를, 종합회계는

북한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회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통일시킨 것은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규정과 일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 기업들이 회계연도를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자유롭게 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 외에 “국가는 재무 분야의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숙련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은 폐쇄적인 북한 체제를 개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제2장의 재무회계에서는 주로 회계보고와 결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재무회계는 자산변동을 매일 기록하고 결산하며 수입액을 확인하는 업무로 정의된다. 이는 유용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의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개념보다 단순한 부기(book-keeping)의 개념에 더 가깝다. 그리고 재정경제 회계보고, 지방회계보고, 부문별 재무결산, 은행의 재정결산, 중앙 재무결산, 재정회계보고의 실시와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회계법에서의 재무회계는 부기를 하고 결산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재무회계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의 재무 상태나 영업성과를 살펴보고,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특히 북한의 중앙집권식 통제 체제하에서는 7·1조치에서 허용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 국가, 그리고 그 하부조직들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계제도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회계법 제2장은 주로 회계를 통한 조직의 통제가 주요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결산과 결산 보고체계가 주된 내용이며, 이러한 결산보고서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북한 회계법은 상급기관의 감시기능을 중요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회계법 제3장은 재무회계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은 조직단위의 자본 이용과 효율성, 예산활동, 통화흐름, 외환수지, 국제수지 등에 대한 분석에 대한 규정이다. 재무회계분석의 규정은 과거의 획일적인 중앙통제체계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경제체

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 중심을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이 강조된 이래, 종래의 도·시·군 계획위원회 이외에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의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 및 기업에 계획부를 설치함으로써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체제를 유지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경제를 계획화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모순점이 되고 있는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고수하여 왔다. 7·1 조치 이후로 이러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단위 기관에 자율을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는데, 북한 회계법 제3장의 재무회계분석은 각 단위 기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자료 등의 사용을 통하여 경제활동 및 경제·기술적 기준에 대한 계획 설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장은 재무회계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회계감사는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단위가 국가소

유이기 때문에 남한의 감사원에서의 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혹은 미국의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의 일반회계감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재무회계 감사는 지방재정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분기별로 실시한다. 북한의 재무회계 감사에서는 감사를 받는 조직단위(기관, 기업, 조직)에서 감사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들의 감사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은 재무회계보고서 작성의 통제 및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작성 지침은 중앙재정기관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회계법은 회계규정의 상위법에 해당되며, 제5장은 이러한 세부적인 회계규정은 중앙재정기관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볼 때 북한의 회계법 채택은 북한 법에 의하여 경제개혁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인 성격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 규정

북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가소유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기계산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이 존재하며, 부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을 두고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

이 규정은 전체가 4장 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일반규정, 제2장은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 제3장은 부기결산, 그리고 제4장은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1장의 일반규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절차와 방법에 맞게 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제시하였고, 부기계산장부와 전표는 중앙재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등을 포함하고 특히 북한 영역내의 외국기업에도 적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개성공단·남한의 기업 혹은 남한과 합작·합영한 기업에 대하여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제2장의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에서는 재산, 채무, 자본, 수입, 지출의 구분과 재정상태와 경영결과의 측정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제2장의 내용은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

의에서의 회계규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자산을 재산으로, 부채를 채무로, 자본은 그대로 자본으로, 수익을 수입으로, 그리고 비용을 지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부기계산의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결과를 사실대로 진실하게 계산하는 것, 두 번째로 부기계산 절차의 준수, 세 번째로 재정상태와 관련된 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회계방법 변경의 금지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본 원칙들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는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재정상태와 관련된 거래와 손익거래는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항목 거래와 손익계산서 항목 거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 손익거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16조에서는 복식부기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어, 재산의 증가는 차방(차변)에, 재산의 감소는 대방(대변)에, 채무와 자본의 증가는 대방에, 채무와 자본의 감소는 차방에 기록하고 수입의 증가는 대방에, 지출의 증가는 차방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북한의 연상자산과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 비교

	북한의 연상자산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
포함 계정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 ^{주)}	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주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차금에 포함되며, 연구비는 모두 비용처리하며, 창업비와 조업비는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는 자산의 구분으로 류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상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동재산은 유동자산, 고정재산은 고정자산, 투자재산은 투자자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연상재산은 무형자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의 무형자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설비와 조업비는 창업비와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더 이상 무형자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채발행비도 무형자산이 아니라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구비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북한의 부기규정은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는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기업회계기준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해당)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가상각금 계산방법을 중앙재정기관이 정

하며 감가상각금은 달마다 계산하여 원가 또는 류통비에 넣는다고 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가상각방법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사전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북한 재무성의 지도하에 방법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회계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각 산업별 혹은 기업별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회계방법의 다양성을 초과이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방법의 통일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감가상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제19조에서는 구입가격은 취득원가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류동재산 중에서 물자재산 가격은 물자구입경비를 제외하고 취득가격으로만 계산한다고

연간 감가상각금 = 감가상각금 총액 ÷ 내용연한 *

감가상각금 총액 = 시초가격(始初價格, 또는 完全復舊價格) + 대보수비총액 - 잔존가격 + 철수비

* 고정재산의 내용연한은 고정재산이 자기의 물리적 형태와 기술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생산과 소비과정
에 계속 참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모든 자산의 구입원가에 취득원가를 포함시키는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자재산에 대하여서만 부대 경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제21조에서는 채무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채무와 장기채무로 구분하며, 단기채무와 장기채무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제22조에서는 자본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주식회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자본금이라는 계정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을 기록한다. 현물재산의 경우 국제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예비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등록자본금의 일정 비율이 될 때까지 자본의 유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일정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의 기금은 합병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합작기업의 경우에는 공동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익의 용어 대신에 이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윤은 재산에서 채무와 자본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

한다.

제24조는 수익의 인식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자본주의에서의 수익인식시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문판매의 경우에는 출하시점,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판매가 실현된 시점, 견본판매(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용판매라고 칭함)의 경우에는 매입 의사 표시 시점, 예약판매의 경우에는 제품의 인도시점, 그리고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회수기일도래시점으로 하고 있다. 할부판매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회수기일도래 시점의 수익 인식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건설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한 수익 인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인도시점에서 인식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서는 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출은 판매원가, 건설원가, 기타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판매원가는 기초원가와 생산원가를 합하고 기말원가를 공

〈표 3〉 북한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	기업회계기준
회 계 연 도	모든 기업이 1월1일~12월 31일	업종·기업별로 임의로 정함
주 요 재 무 제 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항목	재산, 채무,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 산 의 분 류	유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상재산 ^{주)}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고정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으로 분류
감 가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및 가속상각법 등을 모두 허용
자 본 의 구 성	등록자본금과 이윤으로 구성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
수익(Revenue)	수입이라는 용어 사용	수익
할부판매의 수익인식시점	회수기일도래 기준	판매시점에서 수익 인식 (단,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을 허용)

주 : 연상재산에는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 등이 포함.

제하여 계산하고, 건설원가는 건설원가 완공원가와 건설원가 진행원가로 계산한다. 기타 지출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지출을 계산한다. 따라서 기타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은 부기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29조에서는 부기 결산을 결산기간의 재정상태와 경영활동의 재정적 결과를 확정하는 종합적인 재정 총화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확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제30조에 따르면 결산은 월별, 분기별, 그리고 연도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월

별 결산은 유동고일람(남한의 회계 개념으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열거한 표), 분기 및 영도 결산에서는 부기결산서를 작성한다.

제31조에서는 부기결산서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재정상태표(기업회계기준에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표(기업회계기준에서의 손익계산서)를 기본으로 하고 부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 사용하는 현금흐름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33조에 따르면 이윤은 재정상태표에서도 작성이 되고, 손익계산표에서도 작성이 되며, 두 개가 일치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기업 이익을 계산하고, 이익을 처분한 이후에 나머지가 자본에 산입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남한의 회계개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제4장에서는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제36조, 제37조, 그리고 제38조에서는 감독통제권은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으로 하고, 이 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규정 위반에 5,000원에서 1만원까지의 벌금규정과 형사적 책임규정이 존재한다.

(3)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유사하지만, 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제1장은 일반규정, 제2장은 부기문건 작성 및 부기계산원칙, 제3장은 부기계산자료와 그 계산방법, 제4장은 부기결산, 그리고 제5장은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부기계산은 중앙재정기관의 통제를

받는데 반하여 외국투자은행은 북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다.

제2장에서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의 작성원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유사하다. 제3장에서는 재산, 부채, 그리고 자본 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재산과 부채의 경우는 계정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동일하다. 자본의 경우 자본금은 불입자본금, 예비기금, 그리고 임의의 적립금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은 자금운용수입, 봉사거래수입, 기타업무수입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자금조성비용, 봉사거래비용, 영업비용, 그리고 기타업무비용으로 구분한다.

제4장에서는 부기결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고정재산은 실제가격으로 평가하여 남한에서 고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남한의 원칙과 동일하다. 부기결산에서 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준비금에는 손실준비금과 퇴직보수준비금이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손실준비금은 기

〈표 4〉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은행에 대한 통제권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은행
통제권을 가진 조직	중앙재정기관	중앙은행

업회계기준에서의 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익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보수준비금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장기부채로 기록하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이익의 처분항목으로서 처리된다.

앞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규정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북한에서는 재산의 경우 시가에 의한 재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현재는 자산의 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비교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은행의 부기에 대한 감독통제권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회계 관련 감독권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갖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남한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부기검증사무소와 부기검증원, 제3장 부기검증대상, 절차와 방법, 그리고 제4장 제재 및 분쟁 해결로 나누어진 다.

제1장에서는 본 규정이 북한 영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무역회사의 지사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적법성, 비밀담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기검증사업은 중앙재정기관에 의하여 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부기검증사무소와 부기검증원에 대한 규정이며, 부기검증사무소는 남한에서의 회계법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부기검증사무소에서의 부기검증원의 숫자를 3~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 지역별로 개설이 된다. 부기검증원자격은 북한 공민만이 될 수 있으며, 부기검증원자격시험을 합격하면 부기검증원자격시험위원회가 부여하게 되어 있다.

제3장은 부기검증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부기검증대상문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기검증의뢰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부기검증원이 할당되며, 부기검증이 끝난 경우 부기검증보고서가 작성되는데 부기검증보고서에는 결산내용이 사실과 맞는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부기검사요금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결정하며, 비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다.

제4장은 제재 및 분쟁해결에 대한 규정으로 부기검증원에 대한 벌칙조항과, 부기검증에 대한 청원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부기검증은 북한에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민에 의하여 구성된 부기검증원에 의하여 부기 기록이 사실과 같은가를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마감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회계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서는 모두 국가 재정기관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은 북한 당국의 의지에 의하여 마음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본 장에서는 앞장들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회계관리 현황에 대하여 요약 설명하고,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될 회계규칙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외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기업, 합영기업, 그리고 합작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모든 기업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정부회계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회계는 법규정 준수여

부 뿐만 아니라 자금 및 예산순환과정에 나타난 재원의 조달과 분배과정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회계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계책임을 수탁관리책임 이외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의 책임이 포함된다.¹⁾

외국인투자기업 이외에 북한내부의 기업과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회계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회계제도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회계는 복식부기형태를 사용하며 재산(자산)의 증가는 차변(북한에서는 차방), 재산원천(부채 및 정부교부금 등을 포함)의 증가는 대변(북한에서는 대방)에 기록한다. 분개의 절차도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장에 해당되는 분기일기장에 매일 기록하고, 그 기록은 매일 혹은 일정 간격으로 총계정원장에 해당되는 종합계시원장에 기록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월말 혹은 매 분기말에 부기문건을 작성한다. 북한기업들은 모두가 국가소유이므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회계보다는 정부회계와 유사하며, 따라서 북한기업에 대한 회계기록에서 자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1) Ratcliff는 정부회계보고의 4대요소가 산업, 산출, 결과 및 효율성이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율성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법규정준수와 자원사용의 효율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Ratcliff,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for Accounting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Accounting Journal*, 1979.

둘째는 북한회계가 재무회계적 측면보다는 관리회계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회계는 재무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이 있는데, 재무적 측면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 제공을, 관리적 측면은 기업의 계획과 통제를 위한 내부적 정보 제공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정부회계가 법규정 준수의 여부와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중요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회계는 각 하부조직들의 활동을 국가에 보고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국가는 그 보고를 토대로 하여 하부조직을 통제한다. 따라서 회계는 계획에 대한 성과를 검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회계자료를 통하여 공금의 유용, 횡령, 그리고 기타 재정규율의 위반여부 등을 가려내는 관리적 측면에 치중된다.

셋째는 회계처리방법의 단순성과 통일성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반하여 북한회계법은 북한 재무성의 지도하에 방법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회계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초과이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방법의 통일성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감사제도는 남한에서와 같이 공인회계사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에 의하여 통제목적으로 부기검증이 행해진다. 이는 북한의 기업이 전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정부조직하에서의 일반회계감사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회계는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경제구조하에서 통제 및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제정된 회계법은 이러한 중앙집권적 경제구조로부터 기업에 어느 정도 자율성과 재정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은 7·1 조치를 통하여 노동보수제의 개선, 중앙계획경제의 복원, 중앙정부의 재정수입확대를 통한 예산배분 및 계획능력의 복원을 시도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 회계법도 이러한 7·1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뒷받침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계법에 담긴 내용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의 재정적 이익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서술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 회계제도는 북한 당국의 시장경제적 정책 수단의 도입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

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구성요소를 지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여되어있다. 특히 자본의 개념이 모호하며,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당한 부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00년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개성시 일대에 공단과 배후단지를 조성해 남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이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이 들어섰고 머지않은 시기에 남한과 북한과의 합병 및 합작기업들이 들어설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적용될 회계규정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북한의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에 앞에서 언급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규정과 부기검증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부기규정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준거하여 작성된 남한의 기업회계기준과 그 외부 형식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북한 규정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재정기관의 지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임의에 의하여 모

든 회계숫자가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기검증(회계감사)의 경우에도 북한 공민으로 구성된 부기검증사무소의 부기검증원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며, 검증은 부기결산과 결산내용의 사실 여부 검증에 국한된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창출과 창출된 이익의 배분인데, 현 북한 규정에 따르면 이익의 계산이 매우 모호하다. 배당 또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비율은 중앙재정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 측면에서는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북한의 회계규정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세계회계기준의 통일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현재의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규정에 따르도록 하지 말고 국제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기업 운영에 투명성이 증대되며, 이 경우 많은 남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수영,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한 고찰”, 『회계저널』, 제3호, 한국회계학회, 1995.
- 김광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생성 발전과 전망”, 『북한』, 통권 220호, 북한연구소, 1990. 4.
- 김병호, “북한회계제도에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15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1. 6.
-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2004.
- 『북한백과사전 1』, 2001.
- 북한사회과학원, 『경제사전 1,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 Bailey, D. *Accounting in Socialist Count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8.
- Ratcliff T.,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for Accounting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Accounting Journal*, 1979.